

05

복지

1. 폭력 없고 평등한 광주광역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_ 박수경 132
2. 사람, 동물, 환경이 공존하는 상생의 원=헬스(One-Health) 동물복지_ 봉영훈 136
3. 장애인에게 광주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곳인가?_ 서승호 141
4. 포용과 공정_ 임남수 146
5.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청년 정책_ 최유진 151
6.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돌봄_ 장은미 156

복지 [1]

폭력 없고 평등한 광주광역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박수경
광주여성의전화

본 글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상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성평등센터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함이다. 성평등센터는 성 주류화 정책 및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어 성평등 정책 확산과 성평등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성평등지수 중 낮은 수준에 위치한 여성의 인권·복지정책 영역에서 취약한 안전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키워드 : 광주광역시 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센터, 여성(젠더)폭력방지

1.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산정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정책영역으로 1)성평등한 사회참여, 2)여성의 인권·복지, 3)성평등 의식·문화 3개의 영역과 8개 분야, 23개 지표로 측정된다.

〈표 1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인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를 보면 2019년 광주광역시의 의사결정과 보건 분야는 16개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11위), 가족(14위), 문화정보(12위), 안전(12위)분야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분야별 성평등 수준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71.6	10	72.1	12	73.4	11
의사결정	41.9	1	46.3	1	58.0	1
교육·직업훈련	95.1	6	94.8	8	95.1	7
복지	90.8	4	89.0	6	89.2	5
보건	98.0	5	97.9	7	98.8	2
안전	67.1	15	64.9	15	72.4	12
가족	57.5	15	58.2	14	60.7	14
문화·정보	88.7	8	87.9	9	86.7	12

〈출처: 『2020년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보고서』, 재구성〉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중 안전 분야는 2018년도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9년 12위 중하위권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성평등 의식·문화영역 역시 세 영역 중 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가족분야는 14위 하위권, 문화·정보는 12위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영역별로 성평등 수준은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순위에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상승하였지만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가족 분야를 점검하고 육아휴직자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보장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등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별 인식격차, 여성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심축의 역할로 성평등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II. 지역성평등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역성평등센터는 2019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전국 5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개소된 일반형 4개소는 경기, 경북, 인천,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부산에 거점형 센터가 개소되었다. 지역성평등센터는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표 3 지역성평등센터 개요〉

- (목적) 성 주류화 및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현황) 거점형 1개소(부산, '21년부터), 일반형 4개소(경기, 경북, 인천, 전남, '19년부터)
- (사업 내용)
 - (양성평등 정책 개선) 지역 주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도출 후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계 * 주부, 지역 활동가 등으로 현장점검단(모니터링단) 구성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 주민 주도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주민 참여형 홍보·캠페인 추진으로 공감도 높은 성평등 문화 형성
 - (양성평등 의식 제고)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운영 지원을 통해 실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

〈출 처: '지역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21..11.25〉

Ⅲ. 여성(젠더)폭력방지정책 방향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성평등수준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성평등 수준은 (17)중하위, (18)하위, (19)상위의 변화를 보여 왔다. 2019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나, 여성폭력 범죄 증가세 및 유형이 다변화되고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성범죄, 교제폭력 및 살인,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의 양상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폭력의 대상·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폭력방지 정책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여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성평등, 성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방향은 자치구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구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여성폭력방지 마련을 위해 1)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2)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 4)여성폭력방지정책 제도적 기반에 따른 종합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 문화 조성, 지역기반 주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강화, 지역별 여성폭력 취약지역 분석 및 환경개선 조치, 지역 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성평등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 누적된 성차별 인식을 근절하고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도록 평등 문화 조성 및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데 솔선수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 [2]

사람, 동물, 환경이 공존하는 상생의 원-헬스(One-Health) 동물복지

봉영훈

원헬스 벳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동물병원장)

사람과 동물, 자연환경은 분리할 수 없고 서로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세 구성원의 건강 균형이 무너지면 인류 사회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동물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상생의 대상이다.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원 헬스(One Health) 동물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키워드 : 원 헬스, 동물복지, 상생

원-헬스(One-Health)

#1

현재 전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는 비위생적이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류가 백신 개발과 예방 접종으로 감염증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변화된 환경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2

인류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키우는 소, 닭, 돼지 등의 공장식 축산 농장 사육 방식은 가축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가축들은 인수 공통 전염병 및 동물 질병에 취약하며, 질병 예방과 성장 촉진을 위해 축산 농장에서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몰을 초래하였고 연간 7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3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개,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이주에 따른 마당 개의 유기, 보호자의 경제적·감정적 변화에 의한 반려동물의 유기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간으로부터 버려진 유기동물은 도심과 가까운 야산이나 폐가 등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생존을 위해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 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도심에서 개 물림 사고, 동물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사례는 사람, 가축, 반려동물, 야생동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문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비정상 상태가 나타나면 다른 부문에도 직·간접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 동물, 자연과 환경(생태계) 전체의 통합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며, 이처럼 사람과 동물, 환경이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서로를 보호하고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포용과 상생의 현상을 원-헬스(One-Health)¹⁾라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

국제적인 동물복지 개념은 세계동물보건기구²⁾(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에서 정립되었다. OIE에 따르면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이 살아가는 조건에 관한 개념으로,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하며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피로움과 같은 불쾌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영국 농장 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가 제안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i)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ii)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iii)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iv)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v)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에게도 인간의 권리와 거의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걸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동물권리의 개념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물복지는 인간과 동

1) 원 헬스(One Health)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차원적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세계보건기구, WHO).

2) 세계동물보건기구(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프랑스어, OIE) 가축 위생의 향상과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수용하는 대신 그러한 행위의 주체인 인간에게 양육하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동물복지의 일반적 의미는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이 상해 및 질병이나 갈증, 굶주림 등에 시달리지 않고 심리적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물복지의 대상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농장·전시·실험동물을 일반적인 범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야생동물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공존하며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야생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다.

국내 동물복지 현황

생활 수준의 향상,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313만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가족 또는 5인 이하 가구의 15%에³⁾ 해당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당 마릿수⁴⁾를 계산하면 국내 반려동물은 390만 마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고양이의 잔혹 살해 등 동물 학대 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개 식용농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소유주의 경제적·감정적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⁵⁾하였다. 목줄 착용 등의 행위 규범에 대한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2,000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⁶⁾하였다. 반려동물에 의한 층간 소음 문제,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거주 공동 구역의 급식 및 소음 분쟁은 사회적 행위 규범이 미비하여 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축산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소 380만, 돼지 1,130만, 닭·오리 2억 5

3)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결과 개를 키우는 가구 232만 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72만 가구(3.4%)로 조사됐다.

4)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인식 조사(농림축산식품부)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당 마릿수는 개 1.2마리, 고양이 1.4마리이다.

5)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2021년)

6)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경기연구원, 2019년)

천만 마리를 사육⁷⁾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육류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53.9kg이며, 우유는 80kg, 계란은 268개를 소비⁸⁾하였다. 국내 축산업은 계열화·규모화 추진을 통해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로 생산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개편을 통해 국민은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장식 밀집 사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 살충제·항생제 남용,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구성원의 갈등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살충제 계란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내의 동물실험은 2017년을 기준으로 351개 기관에서 평균 8,700마리의 실험동물을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2년 전국에서 사용한 실험동물 수는 183만 4천 마리였으나, 2017년에는 308만 2천 마리를 넘어서 5년 만에 57% 증가⁹⁾하였다.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의 양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동물실험에 대한 화장품 등 미용 제품의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다.

국내의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회적 규범과 정책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정립되고 있다.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반려견의 동물 등록제와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02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상생의 미래 사회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동물보호·복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학대 처벌 및 관련 산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농장 동물의 복지 기준을 사육·운송·도축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동물실험의 절차 및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복지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도입하였다. 이외에 동물원, 수족관의 시설기준 강화 및 허가제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였던 민법이 개정되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7) 2020년 가축동향조사(통계청)

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9) 동물보호·동물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제외함으로써 사람이나 물건과는 다른 동물 그 자체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사람과 같은 권리의 주체로써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이용을 위해 공존하는 단순 소유품의 가치를 벗어나 사회에서 같이 상생하는 제3의 존재가 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상생의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상생의 원-헬스 동물복지

인류 사회에서 사람은 동물을 삶과 생활에 필요한 활용수단으로 이용했다. 핵가족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충족을 위하여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고, 고단백 식품 소비를 위하여 농장에서 동물을 사육하였다. 실험실에서 키우던 동물을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며 보는 즐거움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은 고도화되고 인구 구조가 소규모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물은 생명체의 존재 가치보다는 인간을 위해 이용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소모품으로 인식되었다. 인류 사회가 진화·발전하면서 동물의 건강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연환경은 훼손되었으며,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간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사육하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이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생명체이다. 미래의 건강사회를 위하여 사람과 동물, 자연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 헬스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의 동물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복지 [3]

장애인에게 광주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곳인가?

서승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장

장애인에게 있어 포용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일 것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시책, 장애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하는 시책,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시책 등이 토대가 될 것이다.

키워드 : 인간다운 삶, 이용자 중심 정책, 포용사회

1. 장애인 포용사회

장애인 정책에 포용의 개념이 들어간 시기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된 2006년 12월 부터이다.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보호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총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로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후 포용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2018년이 되어 서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기조를 안에 장애인 포용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 ‘98년부터 5년마다 수립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란 비전이 세워졌다.

〈표〉 제1차~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구분	1차(98~03)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돌봄,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이처럼 1998년부터 정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여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아래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로 장애 범주 확대, 장애수당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실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 대책, 탈시설-자립지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정말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으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장애인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수요가 급증되는 장애인 환경의 변화 속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낳았다. 지역마다 등록된 장애인 수와 장애 범주가 다르고 주요 산업이 다르며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이동 교통 수단 등 처한 현실이 다르다. 또다른 문제는 지역사회 주도의 촘촘한 서비스의 부재이다. 지역사회 주도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2. 광주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사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2019~2022>

- 장애인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화 추세
 -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구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 69,884명으로 광주시 주민등록인구의 4.78%
 -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장애인 수는 37,28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53.3%
- 장애인 경제적 현황
 - 광주광역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2017년 15.9%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취업 인구 및 취업률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취업 인구 및 취업률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2014	64,393	28,607	28,032	575	35,786	44.43	97.99	2.01	43.53
2017	69,660	21,998	21,266	732	47,662	31.58	96.67	3.33	30.53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1.7%로 나타남
 -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버스, 택시의 불편을 든 비율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2019년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
 - 광주에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216명으로 주요 활동 영역은 미술(37.7%), 공예(21.3%), 문학 및 대중음악(14.8%) 4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표〉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주요 현황

구분	광주 장애예술인 주요 현황
장애유형	• 지체장애(52.5%) 과반이상, 발달장애(18%) 순
문화예술 분야	• 미술(37.7%), 공예(21.3%), 문학 및 대중음악(14.8%) 순
활동형태	• 출판, 발표, 공연, 전시 등 창작 및 실연 중심 활동(78.7%) 대다수
연평균 수익	• 112만원(응답자의 71.7%는 수익 없음)
교육 애로사항	• 교육기관부족(31.3%), 교육장비부족(24.6%), 장애예술 전문 인력 부족(23%) 순
필요공간	• 연습공간(36.1%), 창작공간(27.9%) 순
창작 애로사항	• 연습 및 창작공간 부족(44.3%), 창작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31.1%) 순

• 광주시 장애인 사례(1)

지난 해 6월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갔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돌봄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서 2020년 11월 조사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의 주요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 관련 전체 장애인 중 32.0%가 돌봄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18.2%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이 있었다, 중단 시 어려웠던 점으로 '가족의 돌봄부담이 늘어남'(58.7%), '외출이 어려움'(36.4%), '식사준비 어려움'(25.9%) 순이었다.

〈기사 전문〉

몇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발달장애인 아들과 생활하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아들을 맡겨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광주지역 복지시설이 일괄 폐쇄돼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봐온 것이다. 장성한 아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데 한계를 느끼고 정신병원에 3개월여 입원을 시켰지만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어들자 죄책감을 느낀 어머니는 아들을 퇴원시켰다. 이후 아들을 돌봐줄 복지시설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으며 아들이 내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들 항의를 자주 받게 된 어머니는 주변에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2020.6.5. 한겨레, 김용희기자”

이 일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9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돌봄센터 운영, 24시간 돌봄서비스사업, 주간활동 다중지원사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 장애인 사례(2)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광주 하남산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들 수 있다.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장애인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복지일자리 확대 노력은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근로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지적장애인인 고인은 2인1조의 작업을 혼자서 비상 정지 리모컨 없이 했으며, 업체는 작업 전 사전 조사와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안전모나 안전화,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산재 사망사건으로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의 일터였다. 2019년 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장애인 노동자는 1,426명이다. 5인 미만 사업주와 응답을 거부한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아 산재 장애인 노동자 수는 더 많을 것이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 포용정책 의제

- 광주시 장애인정책위원회(가칭) 설치
 - 국비 예산 및 지자체 내 장애 관련 정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필요
 - 광주지역 장애인 기초 실태조사 수행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
 -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시책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상생형 장애인 취업, 창업 일자리 창출
- 장애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하는 시책
 - 광주장애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 설립
 -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 저상버스 확대 도입,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
- 광주형 장애인 복지 개인예산제 도입
 -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에 시범 적용

포용과 공정

임 남 수

협동조합 정향 이사장

현재 정부는 포용, 정의, 공정, 불공평을 주로 말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젊은이들 또한 공정한 것은 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불평등, 기회와 권한의 불공정, 지역 불균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포용을 사회문제로 연관하여 사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포용사회로 가는 것이 먼 이야기인 듯하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포용으로 가는 길이다.

키워드: 포용, 공정, 불공정, 정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기자회견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 “혁신적 포용국가”,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체 연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포용”, “정의”, “공정”, “불평등”이고, 이들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하지 않은 것은 ‘포용’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1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포용과 함께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9대 전략 —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④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 ⑤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존중, ⑦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⑧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⑨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을 설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은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불

평등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¹⁾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립 그리고 학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방대학과 서울소재 대학의 차별 내지 불평등한 대우 등은 좋은 예이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는 현재의 우리 사회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할 것인지, 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공정과 불공정으로 재단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듯하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있어 포용은 무엇일까? 단언하건대, 포용은 공정한 것이고 포용할 수 없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포용은 ‘남을 아랑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²⁾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포용을 공정과 불공정으로 봄으로써 감싸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용을 사전적 의미가 아닌 공정과 불공정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공정하면 포용하고 불공정하면 포용하지 않는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과거에도 공정과 불공정 현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포용을 공정과 불공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현재의 젊은이들은 공정은 포용하고 불공정은 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포용은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 9대 전략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 완화이다.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 7천850만 원인데 비해 전체 소득에서 16%를 번 하위 50%는 1천233만 원으로 나타나 둘 사이의 격차가 14배에 이른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12억 2천500만 원을 보유해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2천354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가지고 있다. 상·하위 간 격차가 52배나 된다. 이런 결과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4년 만에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³⁾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소득 및 부(富)는 서유럽권에 근접하고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하위 5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5에 크게 못 미칠 정도로 낮다고 보고 있다. 나라는 부강하여 선진국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큰 국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력이 나의 재력이 되고, 부모의 재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출발 선상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유에 의한 불평등을 말한다.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을

1) 유재원 외 7인,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9-04, 2019. 10. 30., 33면.

2) 표준국어대사전

3) <https://news.v.daum.net/v/20211208214211538?f=o>(기사 검색, 2021. 12. 9.)

벗어나지 못하는 것,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포용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회와 권한의 공평이 공정사회이다. 기회와 권한의 공평의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저소득 학생 상위 10% 평균 점수가 고소득 학생 상위 30%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으며, 저소득 학생 상위 30%의 평균 점수는 고소득 학생 상위 과반의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은 고소득 가구 학생과 저소득 가구 학생 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육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교육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기회와 권한의 공평은 즉 공정사회는 노동시간, 교육, 주거 등에 있어 기회균등이고, 기회균등이 포용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임에도 임금 및 처우에 있어 공평하지 않고 기회는 균등하지 않으며, 권한도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포용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것이라는 인식은 교육의 불평등에 의한 교육격차 그리고 최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주택 문제와 함께 포용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셋째, 지역 불균형의 해소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년간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의 24.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역대 정권이 빠짐없이 외쳐온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허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약칭 예타)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가 추진되었다. 이 가운데 201개가 통과되고 110개는 미통과, 16개는 진행 중으로 3분의 1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자치단체가 요구한 총사업비는 435조 1,833억 원이었고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 839억 원으로 53% 수준이었다. 또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를 차지하면서 인구는 50%, GRDP(지역내총생산)는 1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51.9%를, 지방세는 56.6%를 차지하고 있고, 100대 기업 가운데 86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⁶⁾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여기서 발생하는 수도권과 비수

4) 소득·기회의 불평등 심화, 재정학회 정책토론회, 2014. 9.14.;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5)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922791573&code=11151100&cp=nv>(기사 검색, 2021. 12. 9.)

6) <https://blog.naver.com/soonn518/222565528585>(기사 검색, 2021. 12. 9.)

도권의 격차는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이며 젊은이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지역 불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과 젊은이들의 상실감은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일자리 문제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공정의 문제를 넘어 생계, 미래에 대한 문제로 매우 불공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청년고용률이 2016년 41.7%에서 2019년 43.5%로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위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2030 세대의 고용률을 가장 크게 하락시켰다. 청년 신규채용 감소, 대면서비스업 등의 침체, 팬데믹으로 심화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20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376.3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9.0%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불안전 취업상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청년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5.1%로 전년 대비 2.2%p 증가했다. 청년층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이 중 구직단념 등으로 '쉬었음' 상황에 있는 청년이 2021년 1월 49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2천 명이 증가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으면 청년기 경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금손실과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와 겹쳐 미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거나 미래 핵심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가져온다. 청년고용의 문제는 청년기 경제적 활동과 자산 형성에 중대한 문제가 돼 이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결혼 및 가정의 형성 등 청년기 이후의 생애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⁷⁾

이상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포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이외에도 많은 점에서 포용을 공정과 불공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불공정의 해결은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은 기회의 공정, 절차의 공정이 우선시 되어야 포용사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은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인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와 금수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수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회가 공정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7) 변정현, 청년 일자리, 중앙정부정책과 지자체사업의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2021. 7., 20면.

〈참고문헌〉

표준국어대사전

유재원 외 7인,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소득·기회의 불평등 심화, 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

변정현, 청년 일자리, 중앙정부정책과 지자체사업의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2021.

<https://news.v.daum.net/v/20211208214211538?f=o>(기사 검색, 2021. 12. 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91573&code=11151100&cp=nv>
(기사 검색, 2021. 12. 9.)

<https://blog.naver.com/soonn518/222565528585>(기사 검색, 2021. 12. 9.)

복지 [5]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청년 정책

최유진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무국장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을 접근하며,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포용적 사회정책이 각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용정책 실현에 있어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키워드 : 포용국가, 청년, 청년정책, 이행기, 사회통합, 민주시민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기본 개념과 선행 연구

국제사회에서는 OECD, IMF, WEF 등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간 심화되어온 불평등을 해소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development)'으로 향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OECD, 2014;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OECD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라는 정책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335개 회원국들이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OECD, 2018.05.15.).

그와 같은 국제사회의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성장 주요지표였던 GDP(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고용, 문화와 같은 사회정책 지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사회정책을 통한 이들 지표의 개선이 경제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성장을 위한 혁신능력 배양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OECD, 2014; 청년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통해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발표하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포용국가 전략은 질적성장, 공존과 상생, 미래를 향한 혁신사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전통적 사회문제가 아닌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으로서 3가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과 9가지 전략(소득 불평등 완

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p.1-3; 관계부처합동, 2019.02.19., p.4).

김지경 외(2019)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취되어야 할 시기와 대상이 생애주기의 불평등이 중첩되고 집중되어 나타나는 청년기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책영역이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정작 청년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이 감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주거, 복지, 젠더, 심리·정서적 측면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연정선상에서 이뤄져왔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존 정책지원 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거나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단편적 현안 대응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청년들이 삶을 지지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청년 문제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청년당사자들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도 확대되었으나, 청년정책의 개념 부재와 대상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용정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으로써 청년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가 사회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주체로서의 청년

청년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인 사회통합, 사회지속 가능성,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이다.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청년기는 생애초기라는 점에서 전생애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한 청년은 비생산인구를 부양하는 핵심적 생산인구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재생산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이중구조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재생산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의 세대 내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청년의 세대 내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건강과 공정성 인식도 계층적으로 분화되는데 핵심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12개의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정책들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김지경 외, 2019)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생활안전망에 대한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주거지원, 일터 안정보장 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미취업자, 대졸 미만 저학력 집단이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재학생, 대학졸업 이상, 거버넌스 참여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도움 정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또한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차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은 인지도, 수혜율이 낮은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기업 인센티브, 활동공간, 역량개발)에서 크게 나타났다.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청년의 실증적 인식 차이와 정책 배제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도 인식은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①역량개발, ②일터안전 정책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정책욕구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고용안전망, 기회공정배분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해당 연구는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추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고, 미

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여건을 낮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고용안전망 구축보다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경제여건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다른 여타의 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능동적 사회시스템,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사회통합 위한 지역균형 발전, 역량강화와 일터 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오랫동안 사회정책에서 배제되어온 청년이 '청년정책'에서조차 배제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정책 대상이 대졸 이상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제도 설계의 편향성),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대학(원) 재학생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것(정책리터러시 제약)에서 기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텔파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3.69점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4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발견은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 분석결과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집단 차이가 뚜렷했다. 인지도와 수혜율에서 나타난 정책의 배제는 두 가지 측면(①정책 대상 편향성으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약, ②청년 당사자 욕구와 정책 대응의 미스매치)으로 설명되는데, 첫째로는 정책 대상 편향으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약을 들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비정규직의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았다. 이는 청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 청년, 진학 후 학업을 중단하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둘째로는 욕구와 정책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배제이다. 다양한 청년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태와 정책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 정책, 고용안전망 정책은 인지도는 높았지만 수혜율이 낮았다.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증가한 수요만큼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미래사회정책으로써의 포용적 청년정책 접근 필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현안 대응형의 정책이 아닌 현재의 청년세대가 앞으로의 청년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사회정책으로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 교육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

책으로 청년정책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그것의 연정선상에서 청년을 단지 '수혜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이라는 존재가 생애과정 중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갖는 성격은 물론 청년정책이 지향하는바,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를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2019년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한 트뤼도 총리가 발표한 캐나다 청년 정책(Canada's Youth Policy)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대상인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2019)에 따르면 캐나다 청년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을 "①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청년은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청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은 모든 캐나다 국민을 이롭게 한다."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상자인 청년을 이해하는 바탕을 이행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과 대립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왜곡되어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세대 갈등이나 배척이 아닌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의 특성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등 여타의 국내 청년 정책 현황을 비추어볼 때, 청년기본법이 타법의 모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을 시급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청년문제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나 의제 설정 및 실현의 과정에서 청년 간의 배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현시대의 화두인 '공정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이행을 집행함으로써 세대 간, 성별 간, 소득차이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소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사회정책으로써의 사회통합 수단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정책으로써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노력이 수반 된다면 비로소 포용 사회로써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돌봄

장은미
광산구 가족센터장

키워드 : 돌봄, 가족, 세대통합, 이주민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이며 국민의 삶의 생애주기에서 '돌봄'은 핵심적인 영역이다.

돌봄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며, 가족과 여성의 부담에서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포용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점검, 사회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결혼 가족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 가족환경,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세부 제도나 정책의 구체성 부족 및 지역단위까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대 특성에 따른 행동규범이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들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며 반영되지 못하기에 계층간·지역간·성별간 관심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갈등 해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돌봄에 대한 정책과 제안 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통합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돌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돌봄기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돌봄기관 등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마을 안 공유돌봄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돌봄공백이 가장 나타나는 학령기 아동돌봄의 '광주형 온종일돌봄 모형(안)'

(여성가족재단-2020 현안과제 연구보고서)요약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마을 안 공유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을 안 공유돌봄센터' 구축 현재의 지역사회 돌봄기간 간 경쟁구도와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하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입소현황, 운영방식 등의 모든 정보를 돌봄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협력가능하며, 또한 센터마다의 프로그램 질이나 교사 역량강화 교육 또한 공유 돌봄센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운영방향으로 설정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적, 질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돌봄 정책 제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 및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확대 추진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SOC(social overhead capital) 생활밀착형 사회 기반시설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출산 정책 중심보다 아동보육 및 가족정책의 비중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출산 정책의 증점은 결혼 장려와 출산 비용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효과는 미비해 보이며 이에 아동 보육을 포함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교육비, 주거부담,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민간 돌봄기관들을 공공 및 협동형 돌봄의 형태로 변화되어, 돌봄인력의 전문성 증진 및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018년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에 대한 돌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의 대상에게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업무의 높은 강도와 불안한 처우가 가장 힘든 부분이며, 돌봄전문가로서의 인정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돌봄의 경험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자체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돌봄활동과 근무조건에 따라 체감의 난이도가 다르고, 근무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봄에 따라 근무환경, 업무조건 그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 및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

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넷째, 가족의 다양성 인식 및 사회적 모성지수를 높여야 한다.

결혼 기피가 개인주의적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여 가족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개선 운동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현장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감수성을 높이는 지원 및 실천 등이 필요하다.

가족 유형별 경제적 격차는 여전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돌봄공동체 사회화에 대한 인식 홍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정책개발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섯째, 사회통합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청년 세대는 다른 문화 배경에서 성장,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이 다양하나 청년 세대의 특성을 여전히 전통적인 인식 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애 주기별 빈곤, 젠더 관점,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시스템 부재하다.

이에 계층간, 지역간, 성별간, 세대간 관심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글로벌 인구이동 확산으로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인권, 생활보장, 정주여건 개선 등의 욕구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다문화 지원책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찾기 프로젝트로 한국 사회에 초기 정착을 넘어선 가정화 단계 과정에서 겪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유, 정부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인식,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에 과제가 남겨졌다.

결혼이주민 2세의 성장에 따라 한국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프로그램을 통한 현실적인 사회통합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치며

젠더, 계층, 다문화, 세대 등 우리의 인구현상이 전통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청년일자리, 연금 등 한정된 자원과 공정한 기회의 분배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 욕구와 이해집단으로서의 영향도 커지며, 경쟁이 격화되어 사회 계층간, 지역 간에도 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것이다.

또한, 성별 간에도 여성 노동자 참여와 돌봄 부담의 공평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갈등 해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포용어인 '돌봄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 마을 단위, 개인들이 사회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참고문헌〉

- 박태순·김승희(2020)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방안
(광주여성가족재단)
- 전진원·차승은(2018)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유급제공자 조사를 통해 본 돌봄의 경험(서울
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집단지성 포럼 '포용사회'를 말한다

더함 '집단지성' 포럼

집단지성 '포용사회'를 말한다

포럼 개요

포럼 주제
집단지성 '포용사회'를 말한다 - 집단지성이 없고, 지역사회가 답이다-

* 종합세션 및 4개의 부분세션 의제를 집단지성이 장시간에 없고, 지역 정치인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정책화를 주문하는 형태의 종합포론

1부 종합세션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도시계획)	2부 4개의 부분세션 (복지, 경제, 문화예술, 교육)	3부 종합포론 (집단지성이 없고, 지역사회가 답이다)
---------------------------------------	--	---

포럼일자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 16시30분

개최장소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 주최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전남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주관
더함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참여기관
더함혁신사업단 **더함혁신사업단**

참여자방법
[▶ Youtube 검색](#) **광주의 집단지성 '포용사회'를 말한다**

포럼 진행

진행	시간	프로그램	비고
1부	10:00	개회식	인사말, 축사, 내빈 소개 좌장 백미경 시의원
	10:10~12:00	종합세션 (포용도시)	발표 박정환 (전남대 교수)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토론 박다현 (광주여성인우회 정책팀장) 윤화철 (광주·속가농발달협의회 사무총장) 정동주 (전산대 초빙레크교수) 신재욱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과장)
	12:00~13:30	점심	
2부	13:30~15:00	부분 세션1 (복지)	좌장 김희재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경제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발표 박수경 (광주여성인우회 생활동아리팀 원장) 토론 김광호 (안원스 및 사회복지공동모금 이사) 토론 사은호 (재정정책간담회총지원센터 광주지역 센터장) 토론 임남수 (협동조합 정책 이사장) 토론 장은미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토론 최유진 (광주북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장)
		부분 세션2 (경제)	좌장 이철승 (광주지역사업장간담회/경제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발표 김중원 (가치카툰사회적협동조합 부장) 토론 김한영 (광주시 시민사회협력관) 토론 박영구 (안원스 광주지점장부장) 토론 안수정 (한국과학기술원 기업성장기획실장) 토론 오창민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
	15:00~16:30	부분 세션3 (문화예술)	좌장 김희재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경제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발표 박정동 (광주문화재단 지역콘텐츠 팀장) 토론 살연수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이숙영 (광주중문진흥원 기획이사) 토론 신봉규 (전남대 글로멀미디어스프라이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장상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책적 전문위원) 토론 정동희 (전남문화재단 이사)
		부분 세션4 (교육)	좌장 정미근 (광주대 교수/경제문화연구소 소장) 발표 김원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김태희 (광주사립고등학교장/전남소년지정센터 센터장) 토론 백정일 (순수학원장) 토론 주봉희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토론 하정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협력관)
	16:30~16:40	종합포론	집단지성이 없고 지역사회가 답이다
			폐회



집단지성 포럼 '포용사회'를 말하다





주최: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 후원: 전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 주관: LINC+사업단 | 협찬: LINC+사업단